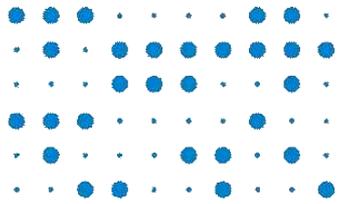


일시 | 2023년 10월 12일 (목) 13:30 – 17:00

장소 | 동아대학교 김관음행홀

주최 | 평화재단

PEACE 2.0



FORUM

B

U

S

A

N

평화2.0포럼 in 부산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그램

13:30	인사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3:40▶15:10	1부 세미나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평화
	사회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발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가나다순) 백두주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임석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5:10▶15:30	평화 공연	
15:30▶16:55	2부 즉문즉설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평화' 즉문즉설 - 미중대립, 전쟁 위기,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16:55▶17:00	맺음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소 개

(가나다순)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백두주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임석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차 례

발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토론	백두주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7
	임석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23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5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9

※ 본 책자는 e북용으로 편집된 것이므로, 실물은 글자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발제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평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1. 글로벌 질서 재편
 2. 유럽 질서 재편
 3. 동아시아 질서 재편
 4. 미·중 전략경쟁
 5. 초연결시대의 새로운 위험
 6. 한반도 정세
 7. 한반도 평화의 과제
-

■ 탈냉전 국제질서 재편과 다극화 무극화

- 미·소 양강 체제 해체, 전통적 안보동맹체제 변화
 -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 NATO의 동진
 -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영향력 약화
 - 미국의 상대적 위상 약화, 미국 내 국제주의 vs 고립주의 경합
- 분쟁 및 세계적 이슈에 대한 국제 조정 메커니즘의 한계
 - 탈냉전기 글로벌 갈등 및 무력충돌 증가
 - 국제질서의 무정부주의화 경향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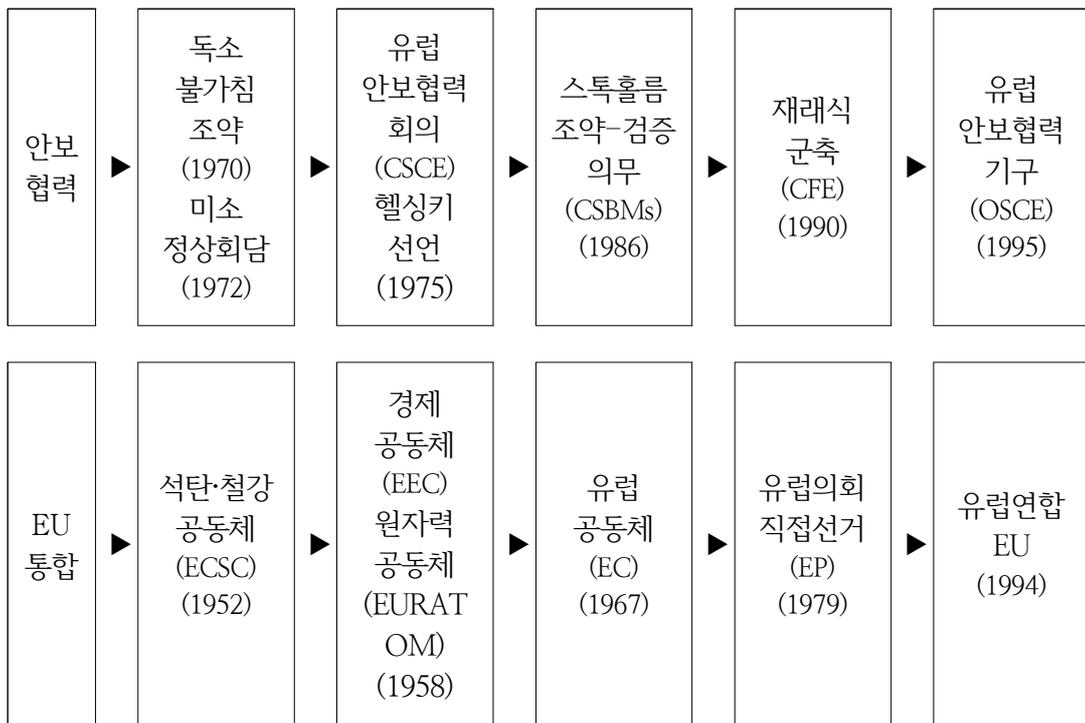
■ 글로벌 안보위기

- 유럽 :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간기(戰間期)의 종식
- 동·남중국해 : 양안갈등 고조, 동·남중국해 역내 영토·영해 분쟁
- 한반도 : 북한의 핵능력 국가 전환 및 한반도 핵대결 시대 도래
- 글로벌 군비 및 핵 경쟁
 - 확산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 등 신 핵무기 경쟁체제 우려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핵위기 여파로 핵 무기 사용 가능성 대두
 - 독일, 일본의 재무장, 유럽의 군비 증강, 아시아 각국 군비경쟁

■ 신글로벌 대립구도 형성 경향

- 민주주의 진영 vs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구도 형성
- 글로벌: 미국, 유럽 등 vs 중국, 러시아, 북한, 시리아, 이란 등
- 인도태평양: 아시아, 미·일 중심 해양세력의 인도·태평양전략 vs 중국
- 유럽: 미국, 나토 vs 러시아

-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서유럽의 통합 과정 진행
 -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발점으로 경제협력과 정치협력 확대
- 냉전체제의 동서 진영 간 안보 협력
 - 데탕트와 헬싱키 프로세스
- 탈 냉전 질서 재편의 여진
 - 유럽연합(EU) 창설 및 나토의 동진
 -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표1] 유럽 신뢰구축과 통합 과정^[1]

[1] 자료: 조한범,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KINU INSIGHT 2019 NO.7(서울: 통일 연구원, 2019), p. 5.

■ 포스트 소비에트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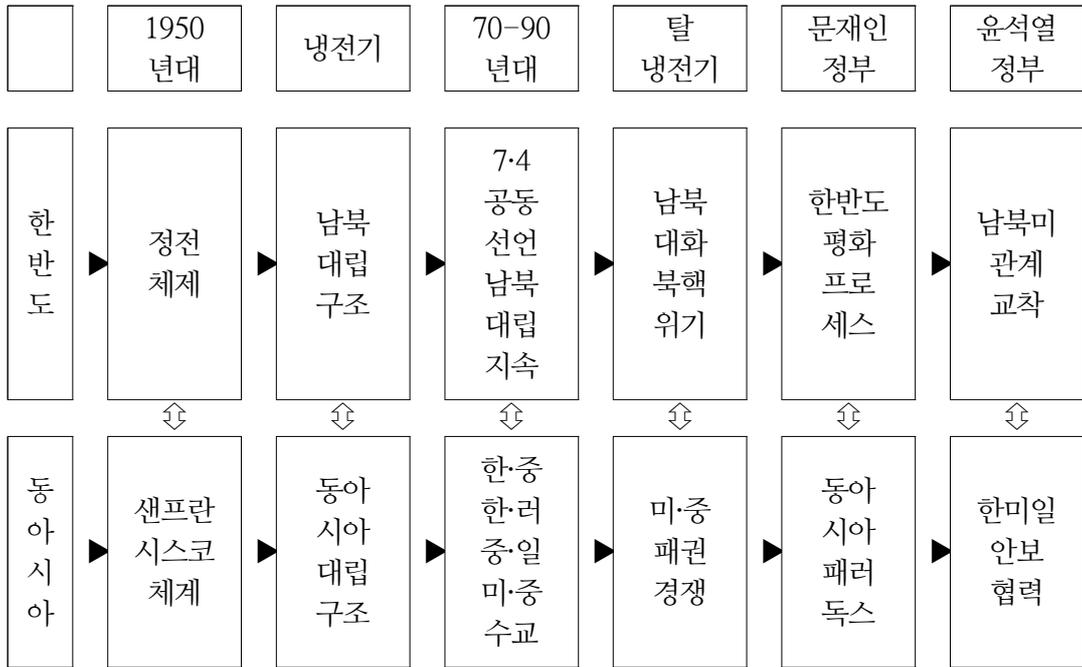
- 1차 체첸 전쟁 1994.12
- 2차 체첸 전쟁 1999.9
- 1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1991.8
- 러시아-조지아 전쟁 2008.8
-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2014.3
- 돈바스 내전 2014.4
- 2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2020.9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2.2
-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분쟁 2022.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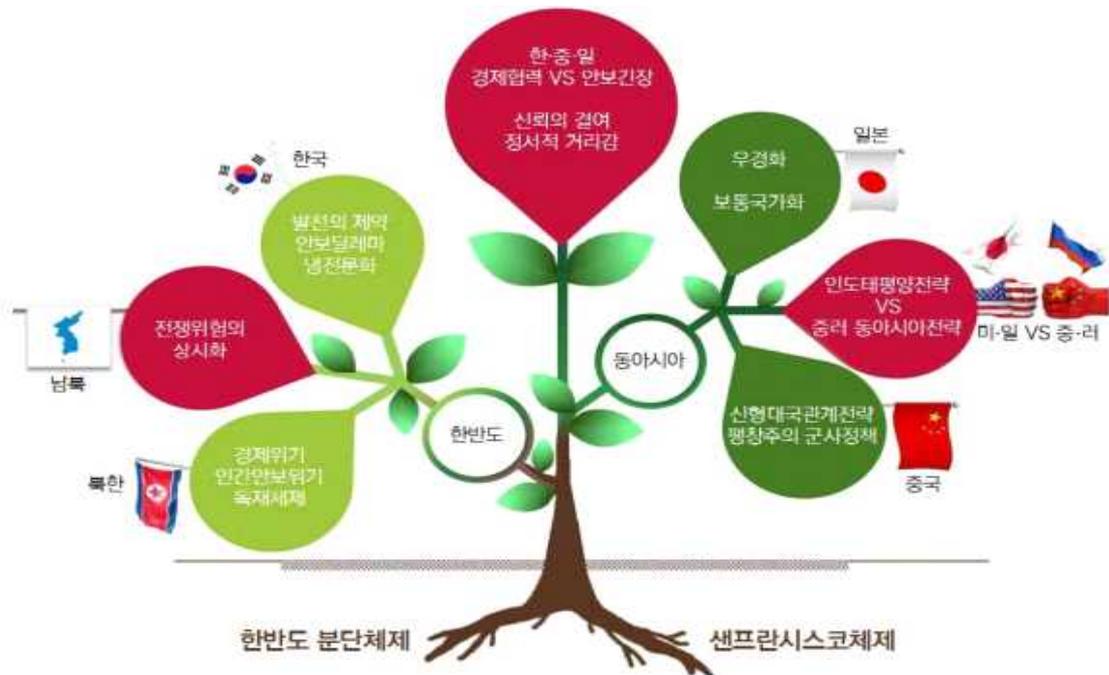
동아시아 질서 재편

- 샌프란시스코체제와 한반도 분단체제의 불완전성
 - 미·중 전략경쟁 심화, 탈냉전기 동아시아 대립구도로 재생산
 - 협력적 동아시아 신질서 형성의 저해요인으로 등장
-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
 - 긴밀한 경제협력과 안보긴장의 이중성
 - 미중전략경쟁의 심화와 GVC
 - 동아시아 패러독스가 생활세계의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

[표2] 한반도 동아시아 질서 변천 과정



■ [그림1] 한반도·동아시아 생활세계 위기 트리(tree) 구조[2]



[2] 자료: 조한범,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이해' KINU INSIGHT 2019 NO.7(서울: 통일 연구원, 2019), p. 7

4

미·중 전략 경쟁

■ [그림2] 미, 다이아몬드 전략 vs 중, 진주목걸이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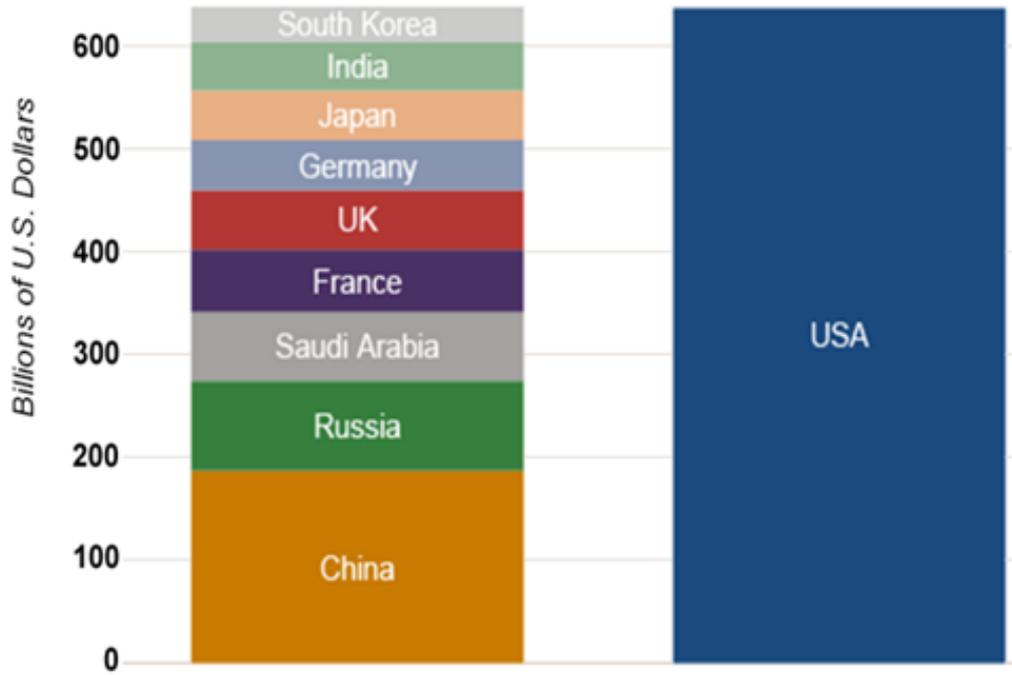
■ 미·중 패권경쟁 양면성: 2023회계년도 미국 국방비 7730억\$

[표3] US vs. Rivals GDP

Rival Power	Year	Percentage of U.S. GDP
Imperial Germany	1917	35.6%
Nazi Germany	1943	26.2%
Japan	1943	13.5%
	1990	52.5%
	2020	23.6%
Soviet Russia	1980	40.4%
Communist China	2020	71.4%

[그림4] 주요국 국방비(나무위키, 2022. 2. 20)

U.S. and World Military Spending



■ [그림5] 2022년 주요국 군비(SIPRI, 2023. 4. 24)



- CT, 인터넷, 소셜네트워크(SNS)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도래
 - 소프트파워, 지식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 신경제, 신안보 위협 증대
 - 첨단기술, 공급망 등 경제·기술의 안보적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 생태환경, 팬데믹, 핵문제, 사이버 테러 등 신안보 위협 증대
- 위험의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Risk Society) 도래
 - 단일 국가, 지역 차원의 대응에 한계, 초국경 협력의 중요성 증대

[표4] 안보개념의 변화

안보 security	주체 subject	위협 threats	목표 goal
전통안보 traditional security	국가 nation	전쟁 물리적 폭력 war physical violence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인간 human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structural violence cultural violence	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
생명안보 life security	인간 종 human species	멸종 extinction	지속가능한 생존 sustainable survival

■ 한반도 핵대결 구도 형성

-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전환
 - 핵무력 법제화(2022. 9)
 - 전술핵운용부대 실전배치(2022.9)
 - 고체연료ICBM, 핵어뢰(2023.3)
 -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2023.9)
- 한미의 대응
 - 워싱턴선언(2023.4)
 - SSBN 한반도 전개(2023.8)
 -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2023.8)

■ 김정은 체제 전략 구도

- 집권 1기 (2011-2017)
 - 권력기반 강화, 핵개발 주력
- 집권 2기 (2018-2020)
 - 경제발전노선 채택, 남북 한반도 정상외교
- 집권 2.5기 (2021.1-) : 집권 2기 전략 부분 수정
 - 자력갱생노선, 체제결속 도모
 - 대남·대미 강경책, 핵지렛대전략 전환

■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 유사성

- 대화와 남북협력 지향
 - 비핵화 진전시 남북협력 및 평화협정 협상 개시
 - 조건없는 대북인도적 지원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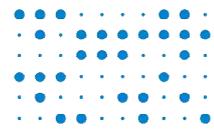
-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 준비”(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2022.5.10)

■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 차이

- 윤석열 정부 : 통일부 국정과제 2개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국정과제 94)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95)
- 문재인 정부 : 통일부 국정과제 5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국정과제 90)
 - 남북기본협정 체결(91)
 - 북한인권 개선(92)
 - 남북교류 활성화(93)
 - 통일공감대 확산(94)
- 윤석열 정부 : 남북관계 정상화 지향
 - 대북정책의 목표로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를 명기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을 명기
- 문재인 정부 : 남북관계 발전 지향
- 윤석열 정부
 - 북한비핵화 개념 사용
 - 한국형 3축체계,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 대응체제 강화
 - 가치외교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 문재인 정부
 -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 한반도비핵화 개념 사용

- 북핵 시대의 한반도 평화정책
 - 북핵 위협의 상쇄와 비핵화 대화의 병행
 - 능동적 자주국방(적정국방+동맹안보)
 - 잠재적 핵역량 구축
- 통일방안의 현실화
 - 통일 필요성지지 : 2014년 69.3% ▶ 2021년 58.7
 - 평화공존 선호 : 2016년 43.1% ▶ 2021년 56.5%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 '선 평화 공존 후 통일' 추진
 - 분단체제의 병식(病識) 공유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
 -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및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거, 성과 도출 지상주의 탈피, 남북관계의 불가역성 확보 주력
 - 한반도형 '내적인 끈' 형성, 조건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체제 가동
- 북한 주민의 고통 경감 및 내적 변화 견인
 -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의 분리 접근, 북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개선 & 고통경감 정책 지속
 -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신뢰를 형성
 - 북한 내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맹아 형성 지원
- 국익우선의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안보
 - 한국이 지향하는 국익의 전략적 명확성에 입각한 외교안보정책 추진
- 글로벌 대한민국의 신국가전략
 - 통일·평화전략+경제발전+한국형 세계전략의 융합

PEACE 2.0

 **FORUM**

B U S A N

남북의 평화적 공진화와 연결성의 확장전략

백두주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로서 중국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미국주도의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트럼프행정부)에서 ‘동맹국 연합’기반 대중국 압박전략(바이든행정부)으로 일부 내용적 변화는 있으나 본질적 속성은 동일함.
-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공세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이적인 성장과 발전에 따른 ‘중국위협론’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평화로운 부상’의 결과 세계 경제발전 및 시장확대로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중국기회론’으로 맞서고 있음.
- 지난 20-30여년 동안 강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도적 초국적 기업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며, 특히 거래 및 노동비용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구축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축은 ‘평화로운 세계화’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내장된 취약성(embedded vulnerabilities)’으로 인한 교란의 위험성이 경고되어 왔음. 특히 중국이 기존과 다른 가치사슬 재편전략(추격전략에서 ‘추월전략’)에 나서고 미국 역시 가치사슬의 내부화 & 지역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미중간 디커플링(decoupling) 논쟁이 촉발됨.

- 특히 무역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 회귀전략(Semicon Pivot to USA)’을 채택하여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하는 한편 한국과 대만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미국으로 회수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함.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향후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패권의 핵심분야로 간주하고 있어 기술 패전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흐름은 이전 ‘차이메리카(Chimerica)’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비약적 발전을 재편하는 동인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복합위기의 중심축을 형성함. 결국 미중간 전략적 경쟁은 세계적 수준의 ‘공공재(public goods)’보다 ‘공공악(public bads)’을 제공하여 글로벌 위기의 심화 및 불확실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이제 국제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화를 기획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

2

한반도 주변 핵심국가들의 대외전략과 위기의 심화

-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수로 작용함. 미중 전략적 경쟁, 미-러 갈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기, 대만을 둘러싼 역내 위기 심화 그리고 최근 북-러관계 밀착에 따른 우려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한미일 vs 북중러 갈등구조의 현실화에 따른 신냉전 구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북중러의 정치군사적 블록화는 중국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규정될 것으로 보임.
- 북핵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핵위기는 상호 적대적 전략이 교차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북한은 핵무기의 다양화와 기술고도화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상태임. 2022년,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법제화에 이르면 따라 한반도의 핵 위협은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옴.

- 현 정부의 대북전략은 이전 정부의 ‘대화를 위한 평화’노선을 포기하고 ‘힘에 의한 평화’로 대전환하였음. 한미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워싱턴 선언’(2022.04)은 핵협의그룹(NCG)의 신설과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담보와 강화를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력에 의한 체제안전 보장 추구하고 남한의 ‘힘에 의한 평화’ 전략이 ‘최악의 조합’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상시적 충돌 위험 가능성은 배가됨.
-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탈이념화 시대에 ‘과잉이념화’에 기초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정상궤도’를 이탈하고 있음. 남한의 대북 정책은 정치권력의 변화에 따라 최소한의 정책추진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음. 다자-양자협의를 통한 한반도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로 남북은 서로 선제타격론, 전쟁불사론, 무력시위가 반복되는 위기국면이 계속됨.
- 또한 미국의 정치적 환경 역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미국 대외정책이 즉흥적이고 극단적 자국중심주의로 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 역시 또다시 중대한 전환점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미중간 전략적 경쟁 및 미-러갈등 구도에서 한국이 ‘전략적 명확성’을 표방하며 올라타면 남한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함. 미일중심의 편향된 대외전략은 남한의 대외적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결과적으로 ‘진영고립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강대국간 갈등 심화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어느 한 진영에 포함되기보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 노

선을 견지하면서 소위 ‘연결성(connectivity) 확장전략’이 요구됨 (RCEP, CPTTP 포함). 나아가 T(Transaction)-25 국가들과의 연결성 강화 역시 중요한 대외전략의 옵션이 될 수 있음.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3 북한의 새로운 체제모델은? 북한의 시장경제 모델 찾기

-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 ‘홀로선 자본주의(Capitalism, Alone)’ 체제에서 현 북한체제의 향후 진화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필요함. 북한은 패권을 위한 경쟁 중인 두 유형의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vs 국가자본주의)체제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 체제’로 간주되어 세계 체제에서 고립된 상태임.
- 현재 국가자본주의는 단일정당 체제 또는 사실상 단일정당 체제에 기초한 효율적 관료주의, 국가의 자율성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함. 이러한 국가자본주의의 원형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이며, 대표적인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됨 (Milanovic, B.).
-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방문(북미회담)에서 “싱가포르의 훌륭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싶다”고 언급함. 중국도 1978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창시자인 덩샤오핑이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변화가 시작됨. 현재 싱가포르는 ‘사실상 단일정당’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에 기초하여 성공적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임. 베트남 모델 역시 일당 지배체제와 규모 및 역사적 경험이 북한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나아가야 할 ‘시장경제’ 모델 중 하나로 간주됨.
- 중국모델은 국가자본주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체제모델 기획 시 상당한 함의를 줄 수 있음. 현재의 북한 체제가 미국식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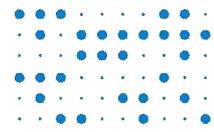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이상’은 기존 북한 정치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임. 현존하는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공통된 특징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임. 중국도 개혁. 개방정책의 적극적 추진, 대미관계 개선, WTO 가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발전을 이룬 것임.

4

남북의 평화적 공진화와 연결성 확장전략

-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의 역동적 변화(재편) 흐름 속에서 북한이 동북아 가치사슬에 편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국가적 쟁투를 넘어설 수 있는 북한의 대외적 연결성 확장전략은 무엇인가?
- 물론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한 전제는 북핵문제의 복잡한 방정식 해결 및 국제적 대북 제재조치 해제, 북미-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과감한 대외개방 전략의 적극적 추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무엇보다 남북의 평화적 공진화를 위한 일관된 로드맵이 필요함.
- 동북아시아의 가치사슬의 재편과 북한의 산업발전을 통합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정상국가’로의 이행과 동북아시아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한 연결성 확장전략이 필요함.

PEACE 2.0

 **FORUM**

B U S A N

토론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평화

임석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조한범 교수님의 발표문을 잘 읽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제질서 변화와 이에 따른 유럽 및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언급하셨고, 최근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을 잘 정리하셨다. 특히, 초연결시대 안보개념의 변화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초연결시대 지구촌이 과거 국가 중심의 안보를 넘어 인간종(species)를 생각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안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공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동의 목표는 아직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모두가 무임승차하려는 공공재로 남아 있다. 조한범 교수의 뛰어난 통찰과 진지한 성찰이 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하길 바라는 바이다.

초연결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안타깝게도 최근 가장 큰 국제환경의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다. 과거 동서 냉전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마-중 신냉전(혹은 패권전쟁)은 군사, 안보, 경제,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성격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일본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으느냐가 미국의 숙제였다(양국은 역사문제, 징용 보상 문제 등으로 2012년 이후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없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구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양자동맹을 다자적 성격으로 전환하려 하는 미국

- 한-미 안보동맹, 미-일 안보동맹을 한미일 협력구도로 만들려고 함 (Camp David, 제도화 노력)
-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용어의 등장 (가치동맹, Value Alliance)

안보는 제로섬(zero-sum)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가치동맹이 강화될수록 경쟁국(중국, 북한)의 취약성은 높아져 간다. 즉, 나의 안보는 경쟁국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되고, 경쟁국의 안보는 내게 불안의 요소가 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이 연출된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인태전략이 성공하면 할수록 중국은 안보위협을 느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점을 질문드리고 토론하고 싶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삼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여기서 도출될 수 있는 공통의 아젠다는 있는가? 미국이 제안하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지속가능한가? 우리의 Plan A는 한미일 가치동맹 구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IPEF가 제도화되지 못했을 경우, Plan B는 무엇인가?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평화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 들어가며

- 글로벌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단히 중요
 -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점차 이동
 - 더 많은 위험 요인들이 양산되는 상황: 러-우 전쟁 / 대만 문제 / 홍콩 사태 등
- 남북관계 악화: 지속적 ‘북한의 도발’은 큰 위험요인
 - 북한은 대화를 멀리하고 도발로 일관
 - 한국 정부는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대화 유도 노력 등 과제 안고 있어

2 태평양질서의 전환과 새로운 블록의 형성 대응 과제

- 미국의 태평양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수정되면서 많은 변화 예고
 - 기존 미일방위조약을 기본으로 하던 태평양전략의 대전환
 -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변화 불가피: 일본 위상에 큰 변화 예고
 - 기존 한일관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중대 시기
- 다양한 국가협력체들의 이합집산과 블록이 새롭게 형성
 - 쿼드, AUKUS, Five Eyes+ α , G7+ α , G20+ α , IPEF, ASEAN+ α , BRICS+ α (Global South)

- 주변 국가들의 위상 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 특히 한미, 한일 관계
- 한국이 참여 가능한 블록에서의 위상 강화 노력과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블록에 대한 관여 및 협력 강화 추진

3

한국의 안보 대응 과제

- 새로운 멀티-블록화 시대에 한국의 안보 과제
 - 냉전 시기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역상황에 대한 이해
 - 기성 한미 안보협력과 다르게 한일 안보협력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
 - : 징용자, 위안부 등의 역사 문제를 사과하고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독도영유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의 과제
 - 미국과 패권경쟁 대상인 중국과는 안보적으로 대립할 것인지 협력할 것인지의 과제
 - 전쟁 중인 인접 러시아와의 안보 문제 과제
- 종합적으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의 과제 제기 필요

○ 북한의 도발과 안보위협 속의 대응 과제

(국정목표 5-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남북대화 부재 속에 현존하는 남북 군사적 대립 상황을 이완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
- 즉, 돌발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과, 기존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재생 또는 수정 또는 재설정 노력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등의 과제

○ 중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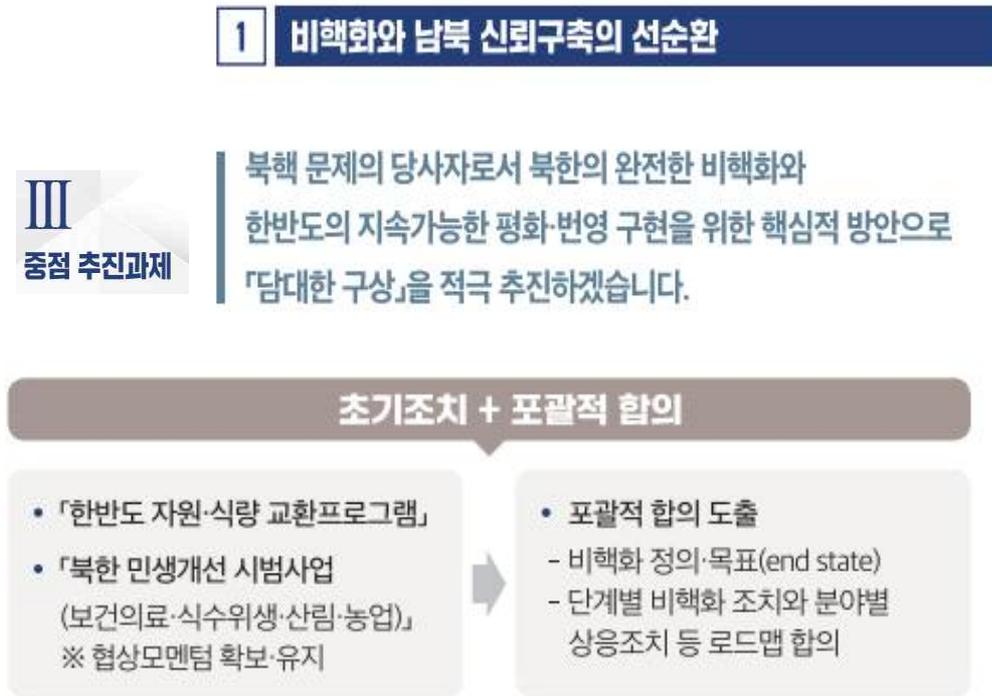
- 대국민공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국민 공감 형성과 민주 시민 양성 과제 중요
- 남북관계: 남북대화 부재시 단기-전략적 정책 수립 필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 등의 과제: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 G to G + 반관반민 + 민간 + 공공외교 전개해야

현 정부의 ‘가치외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중국, 러시아 등을 외교 선상에서 제외할 경우 북한 문제를 해결 가능할지 의문

통일부 국정과제의 내용 중 하나는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 채널 제도화 추진”이며 이를 위해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하겠다는 것. 실현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과제가 있을지

대북 정책의 '담대한 구상'은 아래와 같으며, 어떤 절차들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과제

[그림1]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 평화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

- 탈냉전 국제질서 재편과 다극화 무극화
 - 뉴노멀의 국제질서?: 각자도생의 국가 문화와 강대국 중심의 자국 이익 추구,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등
- 신글로벌 대립 구도와 북중러 vs 한미일 신냉전 구도(미중간 가치경쟁: 자유주의/권위주의 가치경쟁)
 - 미국적인 가치와 미국 중심의 규범,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중국 압박 (대중국 무역 전략 : 미래산업, 디커플링), 동맹국들과의 협력(쿼드, IPEF, 오키나와, 칩4 등 소다자주의)
 - 미국의 대중정책에 방어적 입장, 국내수요창출, 역내중국의 영향력 확대
-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향방은?

2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핵확전 전략

- 강경적 대외정책 회귀와 선제적 핵정책 추진(2019 ~ 현재)
 - 2019년 하노이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미 강대강 외교 추진은 남북관계 단절과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특히, 2020

의도(북한의 핵전략이 과거 방어적/확증보복 전략에서 ‘비대칭 확장’ 전략으로...)

-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군사위성발사 등 최근까지 다수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고, 한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

3

북한의 핵, 전략자산 발전과 경제위기의 양면성

- 국방력 강화를 우선 정책 및 사회주의 자력갱생
 -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추진은 물론 분단관리도 험난한 과정,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김정은 정권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체제 공고화에 활용
 - 남북한 교류협력도 비본질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남측의 책임으로 전가
- 북한 핵무력 강화 의도
 -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한 대외 강경 기조 유지와 국내적으로 핵, 미사일 기술력 홍보를 통한 ‘사회주의 강국’ 이미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 김정은 체제 통치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예상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 간 가치경쟁의 국제정세의 틈새를 활용: 미국 적대시 정책에 맞선 중국과 러시아 등 구사회주의권에 편승하고, 코로나19와 남북경색 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력 발전 및 권력공고화를 추진
 - 북한의 핵·전략 무기 발전을 통한 국방력 강화는 동북아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협력을 와해시키고 외교적 수

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엿보임.

- 대외 공세적 핵무력건설의 성공과 경제건설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좌절
 - 북한은 2019년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의 윤곽을 공개했으며 핵심 키워드는 ‘정면돌파’였음.
 - 북한의 관점에서 핵무력 발전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나, 대북제재 해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경제위기는 사회주의적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투쟁정신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
- 핵정책 추진을 통한 대남압박 및 한반도 우위 선점
 - 북한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남 강경조치들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자리 매김하고 남한 정부가 한미동맹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
 - 대남 압박을 통해 남북 협상 테이블의 우위를 선점하면서, 지난 남북합의 이행에 남한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와 정책을 추진하도록 ‘견인’ 정책을 추진
 - 한·미군사훈련 중지, 남한에 전략무기 반입 및 개발 금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강요
- 북한의 출구전략은?: 반미 정서를 앞세운 구사회주의권의 협력 추진과 북한의 대미 협상 추진 가능성?

- 대외 공세를 위한 북한의 핵중심의 국방력 강화 정책 추진
 - 대미·대남 실전능력 강화, 실전 사용이 가능한 ‘전쟁수행 핵능력 (War-Fighting Capabilities)’ 강화
 - 고체연료형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고체연료형, 다탄두형 ICBM 개발(화성-18형 신형고체 연료 ICBM 시험발사(2023.4.13., 2023.7.12.),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 * 김여정(2023.7.14.): 미국과 유엔안보리를 “짚어대는 개”라고 비난, 미국이 정찰기의 영공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과 군사훈련 등에 대한 대응 주장 ※ ‘북한의 정당방위권’을 주장
 - *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 이후,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순항미사일을 발사(2023.7.22.) ※ 한반도에서 ‘핵대핵’의 대치 양상
 - 전술핵 투발 수단의 다종화, 핵탄두 보유량 확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과 투발 수단의 다종화를 추진 (김정은 연설: “초대형 방사포(KN-25)-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 언급, 2023.1.1.)
 - 군 정찰위성 발사 추진: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의 준비사업 진행 중”(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발사 실패(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만리경 1호를 탑재, 2023.5.31.)
 - * 북한 최고사령부가 전략군 지휘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우주전략부’를 새로 만든 것으로 추정
 - 대미·대남 강대강 정면투쟁(실전형 전쟁동원 준비태세 강화): 신냉전 체계에 맞게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수호’(전술핵·전략핵·정찰위

성 등의 개발, 한미일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대북제재·북한 인권에 대한 공세적 대응)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정책 비전은 북한이 진정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다면, 북한의 민생 개선과 남북 간 신뢰 조성을 위한 초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남북 협상 동력을 마련(‘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2022.11.21 배포)
- 북한의 비핵화에 복귀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나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을 통한 북한 관여정책을 제시
 -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북한 전승절 기념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으며, 김여정 부부장은 8월 19일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폄하하고 사실상 대남 단절을 발표

○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 마련과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 북한이 국방력 강화(핵무력 강화)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대남·대미 군사적 압박을 추진: 북한의 대남 대화 단절과 북핵의 대남 사용 가능성 및 전략무기 발전은 남한이 북핵 안보위기의 당사자로서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확장억제 강화방안: 독자적 대응력 확보 논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킬체인(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 보복 능력을 확보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 *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억지, 확장억제 전략(2023년 4월 한미정상 회담):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대한민국의 핵확산금지조약·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및 명문화
 - *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2023.8)

- 글로벌 복합위기와 북한의 국제정세의 틈새공략(안보자산 확충/신냉전 구도 활용)을 어떻게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구축과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력을 보유하는 한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 추진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 국제사회를 포괄하는 다자협력, 대북압박 동시 추진(당장 북한과의 협상전략은 난망함, 다만 협상은 하지 않되, 대화 창구는 열어 두어야...)
- 우리 정부의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준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탈이념적, 실리적 정책이 고려: 인도적 지원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및 1.5트랙 차원의 대화 창구 필요, 글로벌 NGOs 협력 필요
- 국가전략(Grand Strategy) 수립과 지속 가능한 대북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통일거버넌스’ 추진: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원칙을 대북정책에 적용,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거버넌스 중심의 민간 주도 방식이 필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022년 12월 28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 외교전략)
- 남한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 등을 통해 대북정책·통일담론 재정립(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평화2.0포럼 | 글로벌 복합위기와 한반도평화

발행일 | 2023. 10. 12

발행처 | (재)평화재단

전화 | (02) 581-0581

E-mail | staff@pf.or.kr

© 2023 평화재단

※ 이 자료집은 비매품입니다.

평화2.0포럼
in 부산

PEACE 2.0
FORUM
B U S A N